

“전 집행부 탓”... 끊이지 않는 5·18부상자회 내홍

내부 분열에 책임 떠넘기기 대금 지급 안해 채권 압류 월세 등 미지급 내용증명도 부상자회 “끝까지 싸우겠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새 집행부를 꾸리고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전임 집행부를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끊이지 않는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공법단체로 출범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화합하지 못하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9월 26일 부상자회가 광주 북구 소재 A 경비·경호 용역업체에게 대금 2억164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을 압류했다.

해당 대금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2월

까지 당시 이사회에서 자격정지로 의결된 황일봉 전 부상자회장의 사무실 출근을 막기 위해 계약한 경비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세 달간 8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2억여원의 돈을 받기로 계약했다. A업체는 수십차례 부상자회에 대금지급을 요구했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줄거다’, ‘총회를 거쳐야 한다’ 등의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A업체 관계자는 “다른 곳도 아니고 5·18단체라고 해서 돈을 못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 믿고 기다리다 보니 2억원에 대한 부가세로만 2000만원을 넘게 납부했고, 당시 부상자회의 싸움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다친 직원도 있어 치료비도 지급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커져 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돈 못 받은 사람 입장이라 또 똑같겠지만 아마 법원에서 압류 집행 안 했으면 끝까지 안 줄 것

같았다”고 호소했다.

끝내 부상자회는 채권이 압류당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자 지난 11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회가 겪고 있는 금전문제는 또 있었다. 채권을 압류당하기 하루 전인 지난 9월 25일에는 담양 소재 한 농업회사 법인으로부터 월세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이 부상자회에 발송됐다.

내용증명에는 부상자회가 지난 2023년 5월 9일 담양군 담양읍 한 창고를 2026년 5월 8일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4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지난 4월까지 미지급된 월세 4900만원과 보증금을 합쳐 총 5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부상자회 측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상자회 관계자는 “해당 계약이 체결됐을 때가 전 집행부가 한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로만 내용을 확인했는데 회장 직인도 장도 찍혀져 있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용증명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오히려 공문서 위조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2022년부터 부상자회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한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단체가 분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부상자회가 각종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현 집행부와 전 집행부의 대립으로 인한 책임 떠넘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7월 전 집행부를 지지하는 일부 부상자회원들은 조규연 회장 당선인의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

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지난 6월 부상자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간 내부 경선을 통해 조규연 회장을 후보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위법성 여부를 소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8월 30일 기각했다.

지난 7일에는 부상자회원 50명이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은 회장 출마 당시 학력고사 5·18민주화운동 활동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규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지난 몇년간 오월단체의 내분이 이어지는 것이 ‘제살 깎아먹기’라는 것을 알지만 서로 끝까지 오월을 지켜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싸움을 결코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尹 외교가 빛은 참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퍼주기’ 식막장외교가 빛은 처참한 외교적 수치와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도식은 추도의 대상조차 종잡을 수 없는 괴이한 추도식”이라며 “추도식은 조선인 강제동원을 자행한 일본 정부의 주관하에 진행돼야 하지만, 지자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 주관으로 열려 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번 추도식은 전체 노동자가 추모 대상으로 조선인 동원은 합법이었다고, 당시 일본인들도 다 같이 고생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더 참담한 것은 추도식 참가 비용을 한국에서 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행사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넋을 달래는 ‘추도’가 아니라,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를 자축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급기야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넋을

달래야 하는 추도식에 우익 성향의 정부 인사를 골라 보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굴욕과 외교 참사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면서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매년 추도식을 갖기로 한 것 등을 외교적 성과로 치장해 왔다. 결국 비탄 여론을 의식한 눈속임용이자, 실제 없는 빈 껍데기였음이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일본 니가타현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강제 징용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박철희 주일대사 등을 참석시킬 예정이었으나,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불참을 결정했다.

정부가 불참을 결정한 이유는 일본 측이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을 참석시키기로 발표한 점이 배격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명 기자**



윤석열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와 광주 시민들이 지난 2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추구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윤석열 퇴진...탄핵을 넘어 개헌으로” 광주서 시국대성회

광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개헌을 통한 사회 개혁을 촉구했다.

윤석열퇴진시국대성회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광주시민 시국대성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국대성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선언, 민중의례, 자유발언, 공연 순으로 진행된 윤석

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의 부정과 비리, 부조리에 항거하는 이들에 대해 ‘입막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정권에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17위에서 47위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장이 멈추고 자영업자가 파산하

며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등 경제가 나빠지는 가운데 정권은 부자 감세로 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주·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탄핵을 넘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국대성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